

달라지는 中企 정책

# 정부, 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총력... 3대 프로젝트 추진

〈혁신벤처100·대한민국 펀드·K-유니콘 등〉

코로나 극복 위한 재기안전망 구축  
전통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한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재기안전망도 추가로 확충하고 지원체제도 강화한다.

뿌리기술 기반의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통한 제조 혁신,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도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을 6일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골목 제조

공장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3년간은 이런 토대 위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에 디지털·비대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환경과 디지털을 접목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기존에 추진하던 혁신 플랫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2022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폼 조성에도 힘쓴다.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선 내년까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16만개 구축, 2025년까지 6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아기유니콘(기업당 최대 159억원)→에비유니콘(추가 투자 지원)→유니콘기업으로의 단계별 육성도 각각 지원한다.

제조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법'도 올해 중에 새로 만든다.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재기 지원 등을 위해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3조2000억원 가량의 새희망자금, 1000억원 규모의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도 빠르게 집행한다.

제조업 부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제조업 부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제조업 부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제조업 부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제조업 부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제조업 부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제조업 부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35년만에 창업지원법 개편 "폐업 후 동종사업도 창업"

중기부, 융복합 창업 활성화 추진  
공공기관 구매 목표비율 8% 확대  
'공공조달 멘토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다른 회사의 공장을 인수해 새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폐업 후 3년이 지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도 역시 창업으로 인정해줄기로 했다. 부도나 파산의 경우엔 2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또 올해 기준으로 837개 공공기관들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 가운데 8% 이상을 창업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창업 인정 범위 변경은 86년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시행령이 처음 제정된 후 35년만의 개편이다.

우선 기존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해줄기로 했다.

한 예로 A가 운영하던 타이어 제조

공장이 문을 닫아 B가 이를 인수해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물적기준'(공장)이 아닌 '인적기준'(대표자)만 다르다면 창업으로 간주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면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하면 역시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창업 인정 범위도 넓혔다.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준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까지 확대하면서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구매 목표비율도 8%까지 올렸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구매실적(135조원)을 감안하면 금액으로는 약 11조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만 '비율 8%'에 대해선 2~3년간 운영을 해본 뒤 실적을 점검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멘토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및 소재·부품·기계의 판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

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해 올해 1월부터 두 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文 대통령 "中企 우리경제 뿌리이며 중심, 적극 지원"

국무회의서 기업·자영업 보호 강조  
"中企·벤처 경제 반등의 주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혁신 벤처기업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핵심축으로 인식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소·혁신 벤처기업 지원 전략은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강화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신속 지원 체계 구축 ▲긴급 자금 지원 강화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 촉진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예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할 중소기업 육성 종합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말 뿐인 공공구매제... 운영미흡·처벌무색

이행점검 결과 위반건 1328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점검 결과 제도위반 건수는 총 1328건, 위반금액은 1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이 미흡하고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분석을 통해 중기부가 작년 837개 공공기관 가운데 227개 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해 1328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다.

2019년 공공구매 제도 위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반금액도 1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25억원과 비교하면 75% 늘었다.

제도 위반 건수는 환경부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111건, 산업통상자원부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 위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 건수는 559건, 금액 287억원으로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20%에 달했다.

제도 위반 현황별로는 '중기 간 경쟁제도'가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468억4000만원 규모로 발생해 가장 많았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